

언택트 인프라 3114억, 스마트펀드 2000억

중소벤처부, 추경 3.7조 용도는

1차 추경보다 6000억원 늘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95억

비대면(언택트)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조7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추경보다 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환경 확대 등을 위해 3차 추경안에 3114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 1562곳에 공동화상회의 인

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까지 연결되는 화상 상담장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을 위해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비대면, 온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합동 공동펀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판로 지원 플랫폼인 ‘가치샵시다’에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하는 작업에는 95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505억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편성으로 스마트 물류·서빙·주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을 기존 1000개에서 6400여개로 확대하고, 수작업 공정에 기기 자동화,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작업장을 20개에서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반 스마트 공장도 하반기 20개 지원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창업 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도 3차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 반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대상 중소기업도 기존 2093곳에서 3836곳으로 확대된다.

지금 확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업보증기금을 통해서 2조6000억원이 출연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그린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중기부는 올해 2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그린 분야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린 분야의 선도 창업·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구조의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예방 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통합당 패싱? 21대 국회 개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준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는 모습이다.

관례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은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이후 이뤄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2일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등과 함께 188명이 서명한 21대 첫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제외하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법에 따라 국회를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 법안 심의에도 협조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원하는 데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하자 이해찬 대표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받아친 셈이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5일에 일방적으로 법에 없는 국회의장을 뽑고, 본회의를 진행하면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농식품부 ‘씨없는 수박’ 유럽 등 글로벌서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골든 씨드 프로젝트(GSP) 사업으로 개발한 씨가 없는 ‘블랙보이’와 씨가 작고 적은 ‘달코미미니’ 등이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핵가족과 1인가구 확대, 생활수준 향상으로 세계 수박 시장은 열매가 작고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거나 적어 먹기 쉬운 수박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른 결과다.

3일 농기평에 따르면 GSP 사업에서는 세계 각 지역 수박 소비자 기호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수박 품종을 개발해 왔고, 그중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크기가 작고, 비교적 먹기 쉬우며 당도가 높은 수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사업 채소종자사업단에 참여하는 (주)파트너즈종묘는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과 씨가 작고 적은 수박 품종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21대 국회, 디지털법안 ‘규제 혁신’ 조속 추진을”

중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법제화 절실 자금조달 위한 ‘일괄담보제’ 도입을

비대면 분야 혁신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제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강력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1대 국회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혁신산업(디지털·비대면)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피해회복·정상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 데이터시 등 기반산업 구축 법안 (디지털기반산업법, 인공지능산업법, 클라우드법) 2 스마트공장 법제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3 비대면 서비스 규제혁신 진료(의료법), 보험(보험업법), 에듀테크(이러닝법), 배송플랫폼(의료기사법, 변호사법) 4 플랫폼공정거래 기반 마련 (전자상거래법, 사이버몰 공정화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조달 여건 개선 일괄담보제(동산채권담보법) 2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환경규제 개선(화평법, 화관법) 노동규제 개선(근로기준법, 산안법) 3 리쇼어링 활성화 수도권 입지규제 등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경제자유특구법)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발했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의 비대면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동산·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원활한 자

금 조달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과 리쇼어링(본국 회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만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최우선 규제혁

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의 신속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대 국회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다수의 법률을 가결하며 의미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데이터 3법,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P2P 법) 등이 도입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핵심규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신사업과 중소기업 규제 법안 중 29.6%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김승호기자·백지연 수습기자

韓 산림생태계 복원 남북 공동거점 확보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개최

산림청은 3일 경기도 파주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북한과 가장 인접한 경기도 파주에 설치된 최초의 산림협력사업의 전진기지다. 묘목 생산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양묘장과 전시·교육공간으로 활용되는 관리동 시설을 갖췄다.

준공식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지역주민과 특히 산림청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기반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스마트양묘장 점검. /산림청

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비축과 남북공동 기술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이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산림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자발적 참여, 바이러스 막는 예방 백신”

文 대통령, SNS서 생활방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며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159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인천 17명, 경기 12명, 대구 1명으로 신규 확진자 49명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

고 있다”며 국민에게 생활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밀폐·밀집·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3밀(밀폐·밀집·밀집)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리 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